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7. part2 제 78 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연구원

2017. 07. part2 제 78 호

Contents

Ⅰ. 정부 추진동향

Contents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3
2. 분권 · 균형발전 기대 높지만 , 개발사업 우려도 5
3. 김부겸 _ 지역 다극 체제로 가야 저성장 · 지방소멸 탈출 6

Ⅱ.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 필요 7
2. 혁신도시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을 8
3. 지역 거점大 통합 준비 끝났다…교육부 결단만 남아 9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정책뉴스

02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이 19 일 발표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 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
-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 · 전략, 100 대 국정과제, 복합 · 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2017 년 7 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 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 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 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대 국정과제 (487 개 실천과제)	15 개 과제 (71 개 실천과제)	26 개 과제 (129 개 실천과제)	32 개 과제 (163 개 실천과제)	11 개 과제 (53 개 실천과제)	16 개 과제 (71 개 실천과제)

국정전략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과제 78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 · 국토부 · 행자부)

과제목표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 혁신도시 · 산업단지 · 세종시 ·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 · 책임성 강화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02
주요내용

-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 – 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 · 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 · 혁신, 문화 · 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시사점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투자활성화 또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집중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39899&pageIndex=25&startDate=1997-01-01&endDate=2017-08-07&repCodeType=&repCode=&srchWord=

2. 분권 · 균형발전 기대 높지만 , 개발사업 우려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국정기획자문위 발표 100 대 과제 뜯어보니 수도권은 광역교통 통합 체계 강화 예상

여전한 반쪽 수도 세종시는 기대 못 미쳐 , 경기 북부 개발은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 일 발표한 100 대 과제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 숙원 개발 사업도 상당수 포함
- 지역에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 환경단체에선 즉각 문제점을 지적

- 수도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정책은 수도권 광역교통체제 강화
  -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의 숙원이던 광역교통청이 당장 내년에 신설
  -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와 분당선 노선 연장 (기흥 - 동탄 2- 오산) 으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임
  - 100 대 과제 보고서의 곳곳에서 급행 지하철 건설과 광역 교통카드 도입을 강조해 서울과 경기 , 인천 사이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
- 용산민족공원의 온전한 복원과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
  -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에 대해 앞으로 국가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
- 서울 개발은 창동 – 상계동 , 코엑스 – 잠실 , 마곡지구 , 상암 4 곳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심산업 활성화 정책의 중심지로 선정
- 경기에선 파주와 개성 ·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안 등이 대거 포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정책은 미흡

- 행정자치부는 행정도시법이 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 발표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외에도 국회 분원 설치 , 서울 ~ 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이 100 대 과제로 선정
-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려면 최소한 청와대 제 2 집무실 설치의 아쉬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발 사업엔 우려

- 경기도 북부의 접경지역과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의 우려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 , 강화돼야 하는데 , 자칫 수도권 규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
- 김기석 강원대 교수 : 강원도는 2018 년 초면 끝나게 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제외하면 각 지역의 오랜 개발 숙원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

시사점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수도권 규제 유지 또는 강화를 전제로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 건의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462.html#csidx7609164eaa65c9d98ecfc213eea4340

3. 김부겸 _ 지역 다극 체제로 가야 저성장 · 지방소멸 탈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 Pn

02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의 5 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 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 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환영사**
  - 더이상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 지방소멸 등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고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
-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새 정부가 '준 (準)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당장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 스위스 수준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 스페인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법적 ·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함
  - 북한의 말뿐인 '고려 연방제' 와 혼동해 새 정부의 연방제 노력을 색깔론으로 몰아 가지 않았으면 함
-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 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 세입은 중앙과 지방 비율이 8 대 2 로 중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 정작 재정 사용은 중앙과 지방이 4 대 6 으로 지방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지방이 늘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 새 정부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라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함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일본식 용어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
  -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일반 주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거부하고 작은 공원과 광장 , 미술관 등을 통해 다수가 혜택을 공유하려는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주목해야 함
-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과거 4 대강 사업 당시 별다른 시범사업 없이 시행돼 부작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 실험은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야 함
- **주병철 서울신문 논설위원**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과연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노력이 필요

시사점	저성장과 저출산 , 지방소멸 등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이 수도권의 기능 강화가 아닌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에 있다는 점에 대한 공론화 필요
출처	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0012012#csidxed4501c3305d25fa860eed11a28bbc7

1.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 필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대전일보

02 주요내용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건 좀 추상적이지만,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
  - 이번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이 참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 지방 분권화를 연방제에 논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
  -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
  -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비롯해 상당한 입법적 조치들이 필요
  -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국회의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은 아쉬움
-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
  -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
-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분권의 확대가 지방정부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논의돼야 할 것
  - 개헌을 통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함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
-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자생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최고의 전략
  - 첫째, 지방분권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둘째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과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

시사점 지방분권의 목적을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지역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72960

2. 혁신도시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매일신문사

02 주요내용

21 일 전국 11 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 (지구) 협의회 ' 는 진주시청에서 총회를 열고 '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결의문 ' 을 채택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마련**
-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 2 차 혁신도시 이전**
- **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 · 도비 지원 근거 마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고심**
-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의 35% 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

– 현행법에는 지역 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어 실효성이 없음

-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2 일**

–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용했으면 함

- **국토부 관계자**

– 현재 혁신도시 지방 인재 할당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

– 혁신도시마다 사정이 제각기 달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시사점	혁신도시 시즌 2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역인재 할당을 통해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출처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999&yy=2017

3. 지역 거점大 통합 준비 끝났다...교육부 결단만 남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2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앙일보

02 주요내용

전국 8 개 지역 거점大 입학본부장 8 명 , 25 일 부산대서 난상토론

- **지난 25 일 부산대 통합기계관 세미나실에 모인 국립대학 입학본부장 8 인의 공통된 의견**
  - 지역 거점 9 개 국립대학인 부산대 · 경북대 · 경상대 · 전남대 · 전북대 ·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 강원대는 3 년 전부터 물밑에서 통합대학 구축 작업 진행
  - 3 년전부터 통합 논의...학점교류 · 자원공유 · 공동입시 당장 실현 가능
  - 대학별 입학 점수 비슷한 의과 · 수의대부터 부분 통합하며 전체 바꿔나가야 함
- **임달호 충북대 입학본부장 (전국거점국립대 입학본부장협의회 회장)**
  - 입시 전형 , 전형별 선발비율 , 평가방식 등을 통일한 공동 입시는 지금 당장 도입 가능 ,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 학점 교류 역시 바로 시행할 수 있음
  - 교육부가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려주면 된다고 강조
  - 9 개 대학은 3 년 전부터 입시 관련 연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입시 전형이나 학점 평가 시스템을 통일시켜 왔으며 ,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용어를 일원화한 것이 단적인 사례
- **입학본부장들은 대학 명칭을 한국대학교로 통일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 목소리 냄**
- **여러가지 예상되는 난관**
  - 9 개 대학 구성원들의 학력 차이부터 9 개 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중소 국 · 공립대와 지방 사립대의 거센 반발
  - 대학 재학생 , 교수 , 직원을 비롯해 동문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통합을 한 번에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음
- **거점대학 통합을 반대하는 중소 국 · 공립대와 지역 사립대가 많음**
  - 거점대학에 교육부의 지원이 쏠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역 대학이 많음
  - 하지만 거점대학이 바로 서야 인재가 지역에 남고 , 지역이 살 수 있다 . 지역이 살면 지방 사립대 , 중소국 · 공립대와의 상생이 가능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대학을 키워야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
- **9 개 대학 구성들의 내부 반발**
  - 대학 서열화로 9 개 대학 내에서도 학력 차이가 있음
  - 먼저 각 대학마다 정체성과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
  - 학력 차이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졸업생들에게 국가고시를 의무적으로 치르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학과 교육은 이미 표준화 돼 있음

시사점 인재 양성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교육의 기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791823